

# 민주 광주 ‘입당원서 지지후보 명시 논란’ 공방

### 정치개혁연대 “사과, 사퇴 없으면 중앙당 특감 요구”

### 광주시당 “공정경선 위한 조치, 말꼬리 잡기 멈춰야”

지지 후보를 적시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신규 당원 입당원서를 둘러싼 논란이 중앙당 특별감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원 중심 혁신을 기치로 내건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입당원서에 ‘제출 후보’, 즉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입당인지’를 밝히도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시당위원장 사과와 사무책임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같은 요구가 무시

될 경우 광주시당의 온갖 비민주적 운영에 관해 중앙당의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혁연대 측은 “지지후보 명시는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하다”며 “단순히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입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는 민주당에 새 정치, 새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입당하는 이들이 다수인데 지지후보를 먼저 밝히려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과 정치적 자유에 어긋나고, 결국 현역에게만 유리한 조치”라고 반발

했다.

또 지난 4월 11일 각 지역위원회에 가장 최신 버전인 3월분 당비 납부당원 명단이 배부된 점을 예로 들며 “지역위원장인 현역의원 입장에선 기존 당원 명단에다 신규 당원의 지지 후보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시작부터 불공정하고, 당원명단을 한 손에 들고 링에 오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내부 총집”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정치신인 통제”, “불공정한 현역프리미엄”이라며 당내 혁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은 “말꼬리 잡기” “내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대외비 자료’ 유출에

대해선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광주시당은 “입당원서 위·탈법 사례에 대한 설명과 공정한 경선을 위한 지침은 연초부터 충분히 전달됐고 서약서에 ‘제출후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당원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치 신인이나 당원 통제 아니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당원 명부 교부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전면 중단돼 있어 우호 당원을 미리 파악하고, 당원입당을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기 기자

## “특전사회 대표해서 참배”...대표해 사죄 임성록 대한민국 특전사회 고문 민주묘지 참배



임성록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사진 오른쪽)과 5·18최초 희생자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김태수씨가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 행방불명 자묘역 내 이창현 군의 가묘를 찾아 묘비를 닦으며 참배하고 있다.

전날 무산된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의 연장선으로 특전사회 간부가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을 향해 사죄했다.

임성록 특전사회 고문은 4일 오전 5·18 최초 희생자 고(故) 김경철 열사의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김태수씨와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임 고문은 임 여사의 손을 잡고 민주묘지를 넘어 추념탑으로 향하던 뒤 헌화·분향·묵념했다.

묵념 등을 마친 임 고문은 임 여사의 안내에 따라 김 열사의 묘소와 고 최미애·백대환 열사의 묘소 등을 찾았다. 묘비를 양 손으로 감싸 고개를 숙인 뒤 흐느끼거나 거듭 “잘못했다”거나 “용서해달라”고 했다.

5·18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은 임 고문은 묘역 하단에서 모든 행불자의 가묘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임 고문은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 했다.

이날 임 고문의 참배는 전남 특전사회 단체 차원의 참배가 무산되면서 진행됐다. 특전사회의 참배를 막아선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의 만류에 민주묘지 입장이 막히면서 참배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단체를 대표해 온 것이다.

임 고문이 5·18 희생자들의 묘소를 찾아 직접 참배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19일 임 고문을 비롯한 특전사회 간부진은 5·18 부상자회 등이 연 ‘대국민 공동선언식’ 참석 직전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추념탑 앞에서 묵념만 한 뒤 곧장 자리를 떠났다.

참배를 마친 임 고문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 2월 19일 진행된 대국민 공동선언식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는 그에 걸맞게 징정한 사죄를 드리는 자리였다”며 “당시 진행된 민주묘지 참배는 전 날처럼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상황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입장을 바꾼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기 기자

## 민주 광주시당 ‘日 오염수’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3일 도시 관문인 광주송정역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수산물 수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병훈 시장위원장(광주 동남을)을 비롯, 송갑석 최고위원, 윤영덕·이형석·이용빈·김경만 국회의원, 정문성 시구를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 핵심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지 않고 면회부를 주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탈레이탈언과 피켓 퍼포먼스, 구호 제창, 서명운동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특히 “정부의 반복되는 매일 굴종외교가 이제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 위원장은 “범국민적 반대에도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핵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일본을 옹호하고 있다”며 “일본의 방사능 핵 오염수 투기를 합리화시켜주는 등 투기 응원단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폭력진압 사과하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중심실천당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일 국방장관 회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 북핵 위협 억제 위한 안보협력 공감...4년여만 회동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의(일명 상그릴라대회) 참석 계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개최했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특히 양측은 양국 간 이른바 ‘초계기 갈등’ 관련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광개토태왕합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험 비협한 사건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태왕합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서 레이더 조사 문제를 포함한 방위 당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국 국방당국 간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의 가속화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 계속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러한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韓위기 직면...국민 위해 제 할 일 하겠다”

### 이낙연 오는 24일 귀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에 책임을 생각하고 본인이 할 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출국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는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넘어가는 상황에 올린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제가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미국을 떠난다”며 “저는 독일을 방문, 튀빙겐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한다. 또한 독일 정치인과 동료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 곳을 둘러보겠다. 귀국은 24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미국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 꽤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부족한 책에 관심을 보여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미국 대학에서 9회, 일반 단체에서 9회 등 모두 18회(2회 출국기념회 포함) 강연도 했다. 북한 핵무장과 미중 신냉전 속의 대한민국이 강연 주제였다. 저의 강연을 도와주거나 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 예산 집행 부적절” 비판

전남도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2일 열린 전남도 기획조정실 예산결산승인 심사에서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이월액이 98건 1679억원, 사고이월액이 66건 3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듬해로 넘기는 것이며, 사고이월이란 해당 연도 내 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제도다.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사고이월액은 총 2017억원으로 2020년 1260억원보다 37% 증가했다.

차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 이월사업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부처집행이라고 본다”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3년간 1865건·314억여 원 적발”

### 3년간 1만2133개 단체·6158개 사업 일제 감사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최근 3년 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최근 3년 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은 총 9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국민 혈세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

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속 관리해서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

8000억 규모다.

이 수석은 “이번 감사결과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일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 국민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호매민평

이태헌

침묵 IAEA영향

미일공조  
조용 애기들만

안된다고 말쯤해요  
제발이요

ZZZ

일오염수방류는  
방사능테러  
절대안돼

태헌